

‘150조 성장펀드’ 장기투자 기회 보험사, 회계·자본규제 넘어야

AI·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보험사 장기투자 기회도 확대
ALM 중심 포트폴리오 구축 필요
IFRS9 공시 활용, KPI 개선 유도

정부가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앞세워 AI·에너지 등 초장기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보험사의 장기투자에도 관심이 쏠린다. 보험업계가 희소한 장기자산을 국내에서 확보할 창이 열릴 수 있어서다. 하지만 회계·자본 규율의 문턱을 넘어 실제 포트폴리오에 담아내려면 ‘자산부채관리(ALM) 중심’의 실무 해법이 먼저라는 평가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인공지능(AI) 고속도로 구축, 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인프라 투자를 기획하면서 생산적 금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는 실물경제와는 괴리된 국제 등 안전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성해 왔는데 저금리 환경에서 수익률 하락에 고전하고 있다. 특히 수익성 있는 장기투자물이 부족한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의 장기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왔다. 따라서 생산적 금융은 수익성 있는 국내 장기자산을 찾는 보험사에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정책 펀드와 같은 장기투자물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현행 회계기준은 보험사가 새 정부의 투자 프로젝트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생산적 금융과 보험회사의 장기투자 도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펀드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관련 장기투자자가 IFRS9의 당기손익 반영이 불가피하고 지급여력비율(K-ICS) 자본경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험사의 지급능력 정보 제공이 목적인



Chat GPT가 생성한 보험 생산적 금융 이미지.

자본규제 감독회계(K-ICS)와 경영성과 정보 제공이 목적인 일반회계(IFRS9 금융자산, IFRS17 보험부채)가 보험부채에는 그 가치 변동을 자본에 곧바로 반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장기투자에는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보험산업이 K-ICS를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고, 당기손익 변동에 따른 채무형 장기투자의 과도한 회피를 완화하려면 IFRS9 공시의 적극적 활용과 투자성과지표(KPI)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회계 관점의 첫 관문은 IFRS9이다.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장기투자는 통상 당기손익으로 처리돼 분기 손익 변동이 커진다. 반대로 만기가 없고 환매가 제한되는 폐쇄형 인프라펀드처럼 보유성이 뚜렷한 자산은 지분형 분류를 통해 가치변동을 자본으로 반영할 수 있다. 최초 인식 시점의 분류와 공시 원칙을 일관되게 정해 두는 것이 관건이다.

자본규제의 문턱도 높다. K-ICS는 불안정 현금흐름 자산에 높은 위험자본가중을 부여한다. 프로젝트 구조와 계약의 질에 따라 요구자본이 급증하면 K-ICS 비율이 낮아지면서 결과적으로 단기채 선호로 회귀하는 악순환이 생긴

다. 이를 끊으려면 적격 인프라 요건을 명문화해 예측가능성이 높은 자산에 합리적 가중을 적용해야 한다.

공시와 KPI는 ALM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채 대비 자산 민감도, 현금흐름 갭, 헤지 커버리지 같은 지표를 정기 공시에 포함하고 내부성과관리는 배당 여력뿐 아니라 ALM 개선, 장기수익성, 자본안정 기여도를 함께 반영하는 다중 KPI로 전환하는 편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

관건은 정부·시장·회계·감독의 맞물림을 보험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다. 정부의 150조원 드라이브가 자금의 유량을 만든다면 보험은 그 유량을 ALM이라는 그릇으로 받아 자본의 안정을 증명해야 한다.

김 선임연구원은 “당기손익 변동에 따른 채무형 장기투자 회피 유인을 완화하려면 보험사는 IFRS9 공시를 적극 활용해 주주와 투자자에게 K-ICS 효과와 함께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설득력 있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ALM 적합성 등 장기투자자와 관련한 내부성과지표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가치 극대화과 일관된 의사결정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인터넷 안되는 산간에서도 위치 확인

국토부, G-VRS 시범 서비스
센티미터 단위까지 측정 가능

앞으로 인터넷이 잘 연결되지 않는 도서·산간 지역에서도 센티미터(cm) 단위까지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격자형 측위보정정보 서비스(G-VRS)를 시범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센티미터(cm) 단위까지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한 기술이다. 이번 대국민 시범 서비스는 약 300명 정도의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

그동안 제공되던 측위보정정보 서비스는 인터넷 연결이 꼭 필요해 도서·산간 지역이나 차량 등 인터넷이 불안정한 경우 사용하기 어려웠다. G-VRS는 방송 신호만으로도 위치보정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인터넷 수신 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UHD, DMB, 위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며, 인터넷 방식과 다르게 끊김이 적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GNSS 측위보

정정보를 사용하는 드론 택배 배송, 드론 농업 방제, 자율주행 등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G-VRS는 우리나라 전역을 ‘가로 20km x 세로 20km’의 격자 단위로 나눠 측위보정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별도로 위치정보를 전송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격자를 선택해 보정된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G-VRS의 대국민 서비스에 앞서 정지측량, 자동차 주행, 드론 비행 등 다양한 실제 환경에서 검증을 통해 기존 측위보정정보와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측위보정정보 민간기업 협의체를 대상으로 현장 시연회와 1개월간의 사용자 테스트를 마쳤다.

측위보정정보의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신규 위성기준점 설치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흑산도, 거문도, 추자도, 울릉도 등 도서 지역에 위성기준점 4개를 추가 설치해 총 103개의 위성기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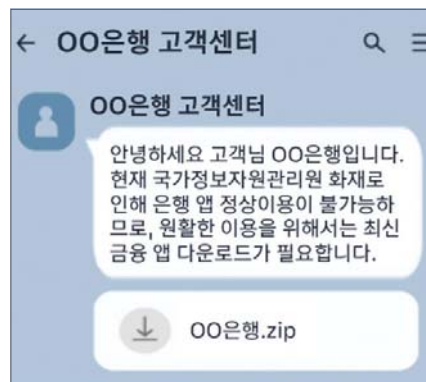
“국정자원 화재 스미싱 조심하세요”

당국,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피싱사이트 접속 유도 등 우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일부 행정정보시스템 이용 제한에 따라 이를 악용한 스미싱 발생이 우려된다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행정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금융회사를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사기) 피해가 우려돼 발령됐다. 지난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에도 카카오톡 설치파일을 위장한 악성 앱 유포와 사용자 확인을 빙자한 피싱사이트 접속 유도 등 수법이 기승을 부렸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문자 메시지 URL을 통해 금융 앱 설치파일



금융기관을 빙자한 스미싱 사기 예시. /금융위

을 제공하거나 임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니,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해 국정자원 화재 관련 신규 스미싱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경우 소비자경보를 ‘경고’ 이상으로 격상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사기범 2913명 검거

총 538억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46명에 징역 7년 이상 중형 구형

정부가 대대적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 중이며, 작년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총 2913명을 추가 검거했다.

또한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에 대해서는 형법상 ‘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특히 적극적인 검거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해 해당 기간 내 총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번 5·6차 전세사기 기획조사로는 20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179

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돼 의심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외에도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808건, 편법중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인한 국제정 통보 56건이 이뤄졌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 검사 등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하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

특히 조직적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토록 하고,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신탁부동산에 관한 무단 임대, 임대차 계약의 승계·갱신 등 다양한 수법에 대해서도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공소유지로 대응 중이다.

제2차 결과 발표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그 중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병행해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총 1487건의 의심거래를 조사한 결과 12건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올해 1분기부터는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 중이며, 시스템 고도화와 학습자료 지속 추가로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스타뱅킹 해외결제, 필리핀까지 확대

KB국민은행, QR결제 플랫폼
외화포인트로 100% 환율우대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해외결제 서비스’를 필리핀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KB스타뱅킹 해외결제 서비스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사인 GLN(Global Loyalty Network)과의 제휴로 제공되며, 현재 태국, 일본, 대만, 라오스, 괌, 사이판, 하와이 등 11개 국가 및 지역에서 QR코드를 활용한 간편하고 안전한 현지 결제가 가능하다.

특히 해당 서비스는 QR결제 플랫폼 중 최초로 외화포인트를 사용해 환율우대 100% 혜택을 제공한다. 외화포인트는 고객이 원할 때 전환할 수 있으며, 해외결제 시 현지 통화로 자동 차감된다. 이

를 바탕으로 고객은 환율우대 혜택과 수수료 절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필리핀 내 1000만여 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KB스타뱅킹을 이용한 QR결제가 가능해지면서, 고객들의 결제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오는 11월 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필리핀 현지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첫 결제금액의 10%(최대 3만원)를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로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해외결제를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